

즐거는 청문회...깊어지는 여야 갈등

민주 "국회법 따른 일하는 국회" 방송장악·검사탄핵 청문회 예고 국힘 "정쟁용·정치쇼"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잇따라 청문회를 주도하면서 여야의 갈등도 이어질 전망이다. 11일 기준 22대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는 모두 8번으로, 4년 내내 많아 봐야 4~6번이었던 역대 국회 청문회 횟수를 훌쩍 넘었다. 민주당이 열겠다고 예고한 청문회까지 포함하면 총횟수는 16회까지 늘어난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 회의록에 입법·현안 청문회 내용이 기록된 16대 국회 이후 22대 국회 이전까지 최다 청문회가 열린 국회는 18대(6번)였다. 직전 21대 국회는 5회, 20대·19대 국회는 각각 4회였다. 민주당은 지난 6월 21일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입법청문회를 시작으로 청문회 정국의 포문을 열었다.

이후 전세사기 피해·의료계 비상상황·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1~2차) 청문회를 줄줄이 열었다. 이들 전 과방위에서 열린 '방송 장악' 청문회는 오는 14일과 21일까지 총 3회에 걸쳐 개최된다. 또한 14일로 예정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 검사 탄핵' 청문회 등 후속 일정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민주당은 이례적 청문회 횟수는 그만큼 여러 분야에서 정부·여당의 실정(失政)이 드러난 결과라며 국회법에 근거한 청문회는 '일하는 국회'에 부합하는 상임위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는 중요한 안건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 수 있고, 제정법안과 전부 개정 법률안의 경우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석수 한계로 야당 주도의 청문회 개최를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는 만큼 여론전에 주력할 태세다. 민주당이 청문회를 입법 논의나 주요 현안 대응

보다는 여권을 공격하기 위한 정쟁용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특히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와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는 민주당이 국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불법 청문회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송장악' 청문회에 대해서 "방통위 무력화를 위한 것", "마약 수사외압 의혹" 청문회는 "정부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여야의 강대강 충돌이 빈번한 청문회가 계속되는 만큼 어렵게 물꼬를 튼 협치 분위기도 곧 사그라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여야는 8월 국회에서 '간호법'과 '구하라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생법 처리를 위해 휴전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정쟁용 청문회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 관계자는 "필요 사안에 대해서 언제든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일하는 국회 정신에 맞다"고 반박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뉴라이트 계열 인사'인 김형석 선임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제79주년 광복절을 니를 앞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국민의힘(위부터),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가 내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거야 맞서 민생 이슈전...정국 주도권 활로 모색

취약계층 전기료 지원 등 발표 원내 장악력 높이기 포석 해석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연일 민생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소수 여당의 원내 사령탑인 한 대표가 22대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에 맞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민생 이슈 파이팅에 나섰다. 분석이 나온다. 한 대표는 최근 취약계층 전기료 지원과 반도체 특별법 당론 추진 등을 잇달아 발표했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토론회를 하자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하자 국회 정부위원회 논의를 촉구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재발 방지와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국민적 관심 사안에 즉각 반응하는 모습도 보였다. 아울러 청년 고독사 문제 해결, 폭염 건설 노동자 휴식권 보장 등을 거론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

한 정책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당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강조했던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며 "사회 현상과 다양한 현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뒤 수락 연설에서 "국민의힘이 중도와 수도권, 청년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는 외연을 확장해야 하고, 그야말로 이길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 대표의 민생 우선 기조는 당정 관계에서도 엿볼 수 있다.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관계"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한 한 대표는 적극적으로 정부에 의견을 개진 중이다.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1만5천원 추가 지원을 정부와 협의 끝에 끝낸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애초 당내에선 한국전력의 누적된 적자 상황을 고려해 추가 지원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지만, 원내 지도부와도 협의를 마쳤다. 최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반대 입장을 표

명한 것 역시 민심과 당심을 대통령실에 전하려는 취지라고 한 대표 측은 설명했다. 한 대표는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권 반대는 논거로 '국민'을 내세운 것이다. 원내 대표인 한 대표의 민생 행보를 두고 원내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심을 지렛대로 이슈전을 펼침으로써 당내 구심력을 키우려 한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민심의 동향을 읽고 정책 개발을 주도할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기능과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홍영미 여원장 교체 가능성도 언급했다. 후보로는 유의봉·유경준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으며 원내에서도 적임자를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권익위 공직자 죽음 내몬 뒷선 밝혀야"

국힘 "죽음 정쟁 삼아 고인 모독"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가 숨진 사건에 대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한 부당한 압박에 권익위 공직자가 유명을 달리한 것"이라며 대역(對策) 공세를 이어갔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종결 처리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보

내야 한다'는 양심적 의견을 냈던 공직자를 죽음으로 내몬 뒷선부터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변인은 "추악한 권력 사유화, 권력 농단의 수렁을 벗어날 길은 오로지 특검법"이라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켜 모든 의혹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전날 고인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면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직이 뒤따라 나와 '도대체 우리 권익위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라며 고함을 질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젊은 국장의 비통하고 서러운 죽음에도 아무런 반성 없는, 잔인한 윤석열 정권의 민낯을 본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화꽃 사진과 함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죄송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분노와 증오의 메시지를 거두고 죽음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역사관 논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반발 광복회·야권 잇단 광복절 기념식 불참 선언

역사관 논란이 불거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놓고 야권의 반발이 광복절 기념식 불참 선언으로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 장관 임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만인의 반대를 무릅쓰고 '뉴라이트' 김형석의 임명을 강행했다. 이 정부의 종일(從日)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인가"라며 "광복회가 창립 후 처음으로 광복절 경축식 불참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김 장관 임명을 철회하고 광복회와 독립유공자 후손들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만약 이번 인선을 고집한다면 민주당은 광복회의 뜻을 존중해 경축식에 불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혜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족정신을 모욕하는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앉았다니 윤 대통령은 제정신인가"라며 "윤 대통령이 임명을 취소하지 않고 마이웨이를 고집한다면 이번 광복절은 '친일절'이자 '국치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보혜 수석대변인은 지난 9일 "이중환 광복회장이 광복절 행사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도 친일·밀정 정권이 주최하는 경축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또 "정부의 친일 인사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규탄 및 임명 철회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형석씨를 독립기념관장으로 계속 불러왔다면 이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모든 야당 및 민족과 역사를 생각하는 여당 의원들에게 제안한다. 국회의 이름으로 임명 철회를 요구하자"고 제안했다. 진보당도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기로 했다.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광복회를 비롯한 독립운동 단체를 사실상 쫓아내고 진자 주인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열리는 경축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며 이같이 전했다. 한편 광복회 측은 지난 9일 김 장관을 임명한 데에는 '1948년 건국절'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대통령실이 건국절 제정 추진을 포기하지 않는 한 광복절 경축식 참석도 무의미하다"며 불참 의사를 드러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격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